

# PPL 사탐팀 (생윤/사문)

## 2023수능대비 6월 모의고사 총평 및 주요문제 해설

### 생윤)

#### 총평: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다. 특히 사회정의, 형벌, 환경윤리가 2점 문제로 나왔다는 점에서 등급컷이 높게 잡힌 것에 영향을 주었다. 제시문의 학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상인지를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일반 독해 문제나 비킬러 문제에서 실수를 한 학생이라면 해당 주제들도 가볍게 개념을 보고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있을 9평과 수능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에 남은 시간동안 철저한 기출분석과 문제풀이가 요구된다.

#### 9번 - 분배적 정의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이다.

이 문제에서 가져갈 것은 갑과 을의 제시문 속에 담긴 내용이다.

갑: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나(=자연적 우연성)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은(=사회적 우연성) 정의롭다거나 부정의 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

=> 1) 우연성 그 자체는 정의 부정의가 아닌 자연적 사실이다. 2) 우연성의 종류는 두 가지로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의 개념 풀이를 익히도록 하자.

"정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1)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다를 구분하는 것은 한 사회가 그러한 우연성 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질서정연한 사회)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을: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소유 권리론에 따르면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 1) 즉 노직은 생산과 분배가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므로 둘은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 1) 즉 생산 시점부터 분배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고 만들어진다 는 것이다.

(ㄱ):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 사실 제시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문장이다. 차등의 원칙이 자연적 운(=우연성)의 도덕적 임의성을 다루어 사회의 공정성을 처리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다.

=> 이렇게 차등의 원칙을 거치고 난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등은 정당화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는 허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ㄷ): 역사적 원리에 따라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가 창조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기반하여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롤스의 경우는 차등의 원칙을 거친다면, 노직의 경우 우연성 자체와 그 결과물은 온전히 개인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단순히 키워드로만 공부하고 선지를 외우는 공부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해당 개념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그 이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0번 - 교정적 정의

갑 : '처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므로 악', '양적 공리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벤담에 해당한다.

을 :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베카리아에 해당한다.

병 :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칸트에 해당한다.

①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벤담이나 베카리아 둘 다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범죄자가 '국한(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일반인 또한 해당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X

②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베카리아와 벤담 둘다 '사회적 파급 효과'를 중시하고 있기에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X

③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칸트이며 이는 벤담과 베카리아를 행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O

④ 사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 인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함을 간과한다.

> 베카리아는 사형이 아닌 '종신노역형'을 통해 공포 인상과, 범죄 예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기에 X

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님을 간과한다.

> 벤담은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벤담은 칸트에게 위와 같은 비판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X

\*비판 문제는 주장하는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이다. 보통 환경윤리나 위와 같은 사회 정의 윤리와 관련한 형벌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기에 학자들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 12번 - 시민불복종

같은 상어이고 을은 롤스이다.

제시문 자체는 기존에도 많이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으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

-----  
(ㄱ): 시민 불복종은 불법 행위이지만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 혹시라도 이 선지가 헛갈렸다면, 시민 불복종의 기초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어찌하였든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이지만 법치를 존중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자.

(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위배한 법)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개념과 그 구체적 사례의 이점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 꼭 체크해 보아야 한다.

(ㄷ):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 중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정의한 법에 항의하기 위해 해당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ㄹ):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어떠한 법이 민주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법의 정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법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선지가 새롭게 눈여겨 볼만한 선지이다. 시민 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심도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 15번 - 해외원조

갑: 롤스

을: 싱어

-----  
ㄱ.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개선이어야 하는가?

> 롤스 O 싱어 X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은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다.

ㄴ.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재분배가 필수적인가?

> 롤스X 싱어X

롤스와 싱어는 해외원조가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싱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ㄷ.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원조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가?

> 롤스X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2016학년도 9월 13번)

롤스의 옳은 문장으로 출제된 바가 있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권의 보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의 강조는 원조 목적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ㄹ.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더 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는가?

> 싱어O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2021학년도 6월 12번)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2020학년도 9월 15번)

싱어가 공리주의자임을 기억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지였다.

이번 해외원조 문제는 예전 기출 문제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 되었으니 틀린 학생들이 있다면 해당 부분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두자.

## 19번- 자연윤리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색칠된 곳만이 아니라 갑, 을, 병 모두의 입장을 확인하여야 함을 주의하자.

갑: 싱어

을: 칸트

병: 레오폴드

-----  
ㄱ.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 싱어O 칸트X 레오폴드X

공리주의자인 싱어만 옳다고 주장할 내용이다.

ㄴ.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싱어○ 칸트○ 레오폴드X

많은 학생들이 L 선지에서 오답을 고르게 되었을 것이다.

동물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싱어가 주장했던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쾌고감수능력'이다.

싱어는 '모든' 동물이 쾌고감수능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꿀, 멧개 같은 일부 동물들은 쾌고감수능력을 지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싱어는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이므로 위의 선지에 맞다고 판단할 것이며,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이므로 모든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ㄷ.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싱어X 칸트X 레오폴드○

동물중심주의인 싱어와 인간중심주의인 칸트는 부정할 내용이다.

생태중심주의인 레오폴드만이 긍정할 내용이다.

ㄹ.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 싱어○ 칸트X 레오폴드X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를 통해 도덕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상가는 싱어뿐이다.

L 선지로 인해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윤리에서는 항상 대상 앞에 붙는 수식어를 조심해야 함을 기억하자. 단순히 인간중심주의/동물중심주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 사상가 별 도덕적 지위의 판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 20번 - 현실주의, 이상주의

(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익 추구로 인하여',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이라

는 표현이 나오므로 현실주의에 해당한다.

(나) '국제적 규범', '국제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상주의에 해당한다.

-----  
X : 국제법을 통한 평화 실현에 회의적인 정도

> '회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입장이므로 (나)는 (가)보다 낮다.

Y : 분쟁의 원인을 상대에 대한 오해에서 갖는 정도

> 현실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전제이 원인을 찾고

이상주의는 상대에 대한 오해, 대화 부족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높다.

Z : 다른 국가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 '다른 국가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에 해당하므로 (나)는 (가)보다 낮다.

X축 낮고, Y축 높고, Z축 낮으면 만나는 것은 ㄷ(4번)에 해당한다.

\*현실주의, 이상주의 문제는 작년 수능에서 매우 까다롭게 나왔던 이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더더욱 심도있게 공부해야 한다. 기출 분석은 기본이거니와 부족했던 부분, 헛갈렸던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에 현실, 이상주의 문제인 것을 찾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부족한 개념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대적 특징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문제는 헛갈리지 않도록 옆에 써놓고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 사문)

### 총평: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된 편이다. 개념문제도 이전과 다르게 시간을 많이 끄는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고, 도표가 4문제 출제되었으나 2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짧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었다.

다만 2번 문제처럼 제대로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거나, 제대로 개념이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틀릴 수 있게 출제된 문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9월이나 수능의 경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진 학생이라면 반드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평소에 해 두어야 한다.

### 2번 - 자료수집방법

갑이 검토한 연구는 실험법을 사용하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므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되었다.

- ① 갑은 선행 연구 A, B를 검토하는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 ③ A에서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 ④ B의 가설은 ㉢과 ㉣ 각각의 변화를 통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⑤ ㉠에서 ㉢은 종속 변수, ㉣은 독립 변수이다.

#### <지문 내용 총정리>

연구자 갑 - 선행 연구 A, B를 검토하는 문헌연구법 사용

A, B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확인

결론 :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려면 타인의 역할과

과업 수행을 위한 행위자의 기본 역량을 변수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 : ㉢ 타인의

역할 - 독립 변수, ㉣ 개인의 과업 수행 - 종속 변수)

선행연구 A (실험법)

가설 :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 집단 : 각자 따로 출발

㉡ 다른 집단 : 여러 명이 함께 출발

타인이 존재하도록 처치해 준 집단 : ㉡ 다른 집단 - 실험 집단

타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통제된 집단 : ㉠ 한 집단 - 통제 집단

결과 : 함께 달린 집단이 따로 달린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냄 (가설 수용)

선행연구 B (실험법)

가설 :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구 게임 수행

가설 검증 방법 : ㉢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의 변화에 주목, ㉣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의 변화에 주목

<유의할 점>

첫 번째 문단의 '그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 두 개의 선행연구 A, B를 검토하였다.'를 제대로 안 읽고 1번으로 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 것임 ->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함

연구 B에서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팀의 관찰자 여부에 따른 점수들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지, 각 팀 간의 점수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님. 이 부분을 놓친 학생들이 많을 것임 -

> 모든 실험법은 각 팀 간의 점수를 비교하여 가설 수용 여부를 정하지 않음

## 9번 - 도표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표를 볼 때는 표와 함께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주자.

- 1) 표에서 전체 여성비는 0.62이다. 상세조건의 여성비 공식을 활용하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00:6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가 아니라  $62/162$  이다.
- 2) 1번 선지에서 구한 남성과 여성 직원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여성 직원을 62명, 남성 직원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명,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는  $(5 \times 62 / 100)$ 이다
- 3) 1번 선지에서 구한 남성과 여성 직원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여성 직원을 62명, 남성 직원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15명이고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는  $(7 \times 62 / 100)$ 이다.
- 4) 사실이 아니다. 1구간에서 2구간으로 갈 때 여성 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 5)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여성비가 줄어드는 것을 표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 15번 - 사회보장제도 도표

이례적으로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몇 년간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단순한 문제로 출제되었다.

수와 비율의 구분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었다.

A: 공공부조 / B: 사회보험 / C: 사회서비스

- 
- 1)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A)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중 수혜자 비율은 12%이다.

2)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서비스(C)이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2015년 남성 수혜자 수는 갑국 인구의  $(24 \times 50/100) = 12\%$  이다.

3)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B)이다.

그런데, 2015년과 2020년인 인구 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4)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부조(A)이고, 의무 가입이 원칙인 제도는 사회보험(B)이다.

2015년, 공공부조의 수혜자 수는 12%이고 사회보험의 수혜자 수는 48%이다.

5) 2020년,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는 갑국 인구의  $(18 \times 35/100)\%$ ,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남성 수혜자 수는 갑국 인구의  $(48 \times 70/100)\%$ 이다.

## 20번 - 부양비 도표

팁 : 부양비 도표는 각 인구별 표를 작성하자!

<표 작성 방법>

구분	t년	t+100년
유소년 인구 (0~14)	40명	10명
부양 인구 (15~64)	100명	50명
노년 인구 (65 이상)	20명	20명
총인구	160명	80명

1. 틀을 작성한다. (회색 부분)

2. '갑국의 부양 인구는 t년에 비해 t+100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으나'를 통해 부양 인구를 설정한다. 이때, 값은 편하게 임의로 설정한다. 주로 100이 들어가게 설정하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숫자

들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200명, 100명으로 설정하거나 100명, 50명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하늘색 부분)

3. '두 시기의 총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합니다.'를 통해 각 시기의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를 구한다. t년은 부양 인구가 100명이기 때문에 총부양비 공식을 이용하여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는 60명임을 알 수 있고, t+100년은 부양 인구가 50명이기 때문에 총부양비 공식을 이용하여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는 30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기의 총인구도 구할 수 있다. t년의 총인구는 100명+60명 즉 160명이고, t+100년의 총인구는 50명+30명 즉 80명이다. (주황색 부분)

4. '<갑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 변화>' 표를 통해서 각 시기의 유소년 인구를 구할 수 있다. t년의 경우 총인구는 160명이고,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이므로 40명이다. t+100년의 경우 총인구는 80명이고,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5%이므로 10명이다. (초록색 부분)

5. 마지막으로 시기별로 총인구,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년 인구를 구한다. t년의 노년 인구는 20명, t+100년의 노년 인구는 20명이다. (노란색 부분)

ㄴ. t년의 노년인구와 t+100년의 노년 인구는 표에 따르면 20명으로 동일하다.

ㄷ.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40/100) \times 100 = 40$ 이고, 노년 부양비는  $(20/100) \times 100 = 20$ 이며, t+1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10/50) \times 100 = 20$ 이고, 노년 부양비는  $(20/50) \times 100 = 40$ 이다.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다.

ㄹ. t년 대비 t+100년에 유소년 인구는  $(30/40) \times 100 = 75\%$  감소하였다.

ㄺ.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경우  $(60/160) \times 100 = 37.5\%$ 이고, t+100년의 경우  $(30/80) \times 100 = 37.5\%$ 이다. 따라서, 두 시기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하다.